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소수자' 용어의 삭제는 성적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가?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가)

'성평등' 용어 삭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사용 등 시대에 뒤떨어지는 개정 사항 만큼이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성소수자' 용어의 삭제일 것이다. 장흥재 교육부 학교교육 지원관의 설명은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 장 지원관은 "성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전제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나온 주장인가? 또한 성적체성이 외부적 요인으로 '조장'될 수 있다는 발상이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인가?

-공정감각\_260p\_2022개정 교육과정의 '성소수자 지우기':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나)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존재 자체를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그 교과서를 읽고 공부할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 역시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나 성소수자 학생도 이성애자 학생과 같은 권리를 지닌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므로, 학교는 성적체성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느낄 학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정체성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교과서 안의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아니라 바로 그 용어를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이 결정이다. (중략) 하지만 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 교직 이수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에브리타임> 전반에서 성소수자는 뿌리 깊은 혐오의 대상 중 하나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교사가, 또는 미래의 교사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학생들을 보호하는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연세대학교 출신의 미래 교사 중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육에 앞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어떤 학생도 교실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모든 학생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마련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공정감각\_261p\_2022개정 교육과정의 '성소수자 지우기':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다)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되긴 하지. 근데 그게 훨씬 더 어려울걸. 내가 남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거 몹시 힘든 일이야.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 되거든, 안전한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여야 하고, 정해진 가치에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하나 자기가 만들어가야 해. 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 설명해야 해. 경쟁을 피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남과 다른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일이라면 말이야.

(라)

세라 박 원장은 “청소년기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시기”라며 “학교 성교육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통계를 정확히 내진 않았지만, 수강생 중 20-30%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레즈비언, 양성애자, 심지어 폴리아모리(Polyamory, 비독점적 다자간 사랑) 현상까지 나타나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동성애, 양성애를 더 부각시키기도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10대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해 100%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 않다”며 “부모님들이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해 갈등으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들이 정체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넘겨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및 치료 보호 법안, 동성결혼 합법화 결혼준중법 법제화에 따라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평등과 수용이나, 정부의 양육권 침해와 미성년 자녀들 성정체성 혼란 조장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학생 20-30% 동성, 양성애, 성전환자” 성 정체성 혼란(2022.12.30.)

(마)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다룰 수 있다고 제시된 ‘성소수자’ 역시 정책연구진 동의 없이 빠졌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의 예로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만이 포함됐다. 장흥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소수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 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이라고 바뀌었다. ‘성평등’ 용어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을 의식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그런 현상 자체를 문제시해 논의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교육과정이 모든 가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르쳐야 할 사안들을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는 뺀 새 교육과정, 보수 색채 강화(2022.11.09.)

2.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실현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쉽게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인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이동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장애인들의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

2022년 현재 전장연의 시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한' 방식이므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비단 <에브리타임>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에겐 시위로 자신이 입은 피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으로 사람들은 3.1운동에서부터 4.19 학생운동,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촛불집회로 이어온 '시위의 역사'를 꼽곤 한다.

그렇다면 이 자랑스러운 시위들은 온전히 '무해한' 것이었을까? 3.1운동 이후 일제의 잔혹한 지배는 더욱 기세를 떨쳤으므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운동에 반대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3.1운동도 무해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제도적 민주주의를 가져온 80년대 학생운동은 당시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을 수 있고, 촛불집회 역시 촛불을 들지 않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을 수 있다.

그 어떤 시위도 이 점에서 완전무결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그러므로 중단했어야 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한 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시위가 존재할 수 있는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때 그 시위의 영향력이 미미했고,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른바 '무해한 시위'를 유지하는 것이 시위의 본질이자 목표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시위란 공공의 장소에서 그동안 침묵해온 사안에 목소리를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무해할 수 없다.

-공정감각\_236p\_무해한 시위는 없다

(나)

즉, 시위로 발생한 피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이 이를 인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전장연의 시위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동권이 생존권이나 교육권 등과 직결된 권리인 만큼,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21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방식을 선택하는 데서 보다 파급력이 큰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장연 시위로 겪는 '불편함'을 정말 '피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앞당기려 노력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잠시 '불편'했던 것을 '피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 사회는 보다 민주적으로 변모했고, 그 혜택은 모두가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70~80년대 당시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았을지라도 묵묵히 참아낸 그들 역시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시민인 셈이다. (중략) 이른바

인권 '선진국'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물 파손이나 방화 등의 폭력이 더해진 과격한 시위가 자주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그 나라 시민들의 태도는 다르다. 시위로 잠깐 불편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중단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해서 시위를 지지했는데, 다른 시위의 당사자였던 경험에서 오는 공감과 그들이 잠시의 불편을 감당하고 이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장 시위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이후 다른 시위에 참여하게 될지 모른다는 상상력은 시위로 발생하는 불편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시야를 넓혀준다.

-공정감각\_239p\_무해한 시위는 없다

(다)

서울시는 94%의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6% 역사는 역사의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곳들이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오세훈 시장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하겠다고 했음에도 출퇴근 시간 볼모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 넣는 방식으로 운행 막아 세우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 광역 교통 수단에 휠체어 접근성 높이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장애인 단체 요구사항은 이동권 문제 아니라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 예산, 탈시설 예산 등을 요구하는 걸로 바뀌었다. (...) 전장연은 조건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시위 중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 사항 100% 관철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 불편 야기해 뜻 관철하겠다는 것은 문명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합리적 논의와 대화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이준석\_前 국민의힘 대표 발언

(라)

#네이버

출근길 경험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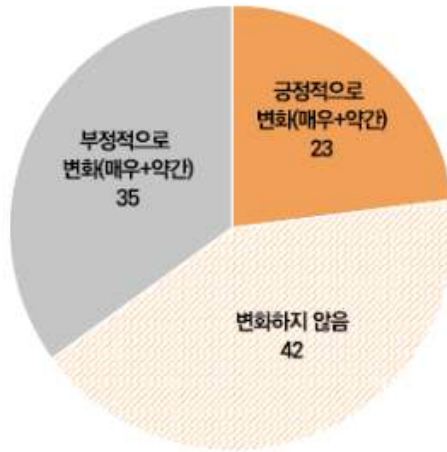
"진짜... 너무해.. 출근시간 아닌 때 하면 되지... 왜 우리 같은 시민들이 출근을 못 하게 하나... 좀 너무하다 이걸... 장애인들 힘든 건 나도 알지만.. 서로 피해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ㅠㅠ"

ID 'sket\*\*\*\*'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시민의 댓글

(마)

시위 전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음' 42%, '부정적 변화' 35%



전장면 시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절반 가량, 시위 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나빠졌다고 답해

(단위: %)



질문: 올해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응답자 수 : 장애인 이동권 시위 인식자 780명

조사기간 : 2022. 6.3. ~ 6.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저자는 남녀 임금격차가 존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남녀 차이 하나만으로 격차가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존재 한다면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

(가)

한국 사회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고 있을 때 여성은 70만원도 벌지 못하는, 성별 임금 격차 OECD 꼴지, 꼴지에서 두 번째 일본과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를 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해왔고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자 클레본, 랜다이슨, 소가드는 성평등 지수 세계 최고 수준인 덴마크 여성들조차도, 남성과 '나란히' 받던 임금이 첫 자녀 출산 직후 떨어져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나)

이렇듯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는 제도인 여성할당제를 문제 삼는 윤석열, 이준석 등의 보수 정치인들은 여성들이 돌봄 노동 때문에 떠난 그 일자리를 능력과도 무관하게 차지해온 '돌봄-무책임자' 남성들과 남성 할당제에 대해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다)

또한 여성이 특정 직업에 일정 비율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역차별이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중략-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여성 군인/여성 경찰 할당제 등 제도적 조치에 대한 반발, 여성 경찰의 능력을 비하하며 폐지하자는 여성 경찰 무용론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중략- 그러나 인터뷰에서 한 경찰은 "물리적인 힘을 이유로 여경 무용론을 말하는 것만큼 비논리적인 주장은 없다. 만약 남성 경찰이 힘이 센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해서 남성 경찰들이 무용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할 때 홀수 번호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든다. 또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고 꼬집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별로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제가 이 발언으로 저의 순번이 밀리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사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마)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때 감소했다가 20세기 이후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다시 증가세를 그려왔다.

교육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돼 현재는 고소득 국가 대다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

이 크게 높은 상황이라고 노벨위원회는 지적했다.

노벨위원회는 그러면서 "골딘은 피임약에 대한 접근이 이런 혁명적 변화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결과적으로 성별 격차의 상당 부분은 교육과 직업 선택에서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4. 비건이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철학적 신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가 종교적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 학생의 입학을 허가했기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장식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양은 14%에 달합니다. 그리고 공장식 축산업계를 위해 전 세계의 열대 우림을 끊임없이 벌목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다 쓰레기의 절반은 어업에서 발생하며, 그물, 스티로폼 등 바다 쓰레기 때문에 거칠어진 물살이 물고기 어종들의 멸종을 불러일으키고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공장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되는 비유과 무분별하게 양식하고 잡아들인 물고기 등을 지금보다 줄일 수만 있어도 우리는 기후 위기 해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수증기이다.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중략-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유해하다 지구온난화 해결책으로 전 세계인들은 100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 돈으로 지구의 온도를 1/6도 낮출 수 있다

(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주범이라고 환경학자들은 몰아가지만,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역사 전체 기간에 있었던 것보다 현저히 낮고 무엇보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낮은 농도는 모든 식물을 굶주리게 하여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라)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18년간 지구 온난화가 멈추었고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는 기후 위기로 바뀌었다.

(마)

나의 음식에 대한 취향과 지향을 마치 없는 것처럼 다루지 말고, 존중해달라는 요구가 '정치'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정치적이 된다는 걸 마치 무슨 다른 의도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런 요구를 통해 다른 목적이라도 이루려고 한다는 듯한 친구의 말이 언짢았습니다.

(라)

학교는 학내의 모든 구성원을 차별없이 존중해야 한다. 만약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입학했다면 그 학생이 다른 학생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함으로써 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슬림 학생에게 입학을 허가 했다

면 그가 종교적 의무와 권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학교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내 식당에서 학식을 먹을 수 있고, 기독교인처럼 학내에서 예배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끔 말이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달리 '울며 겨자 먹기로' 도시락을 싸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